
제주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석학 초청 특강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2018. 5. 11.

I. 개최 개요

□ 목 적

- 새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
-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은 개원 21주년을 맞아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님을 모시고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행사명 : 제주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석학 초청 특강
- 주 제 :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강 연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 주최·주관 : 제주연구원
- 일 시 : 2018. 5. 11(금), 16:00
- 장 소 : 메종글래드제주 제이드홀

II. 특강 프로그램

시 간	소요	프로그램	비 고	
16:00~16:10	10	개회식	사회	강창민(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개회사	김동전(제주연구원장)
16:10~17:30	80	특강	특강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17:30~17:40	10	질의응답	질의응답	
17:40		폐회	폐회	

프로필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 GlobalAsia 편집인

- | | |
|-------------|---------------------------|
| 2016 |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 |
| 2006 ~ 2008 | -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
| 2005 ~ 2017 | - 동아시아재단 이사 |
| 2004 ~ 2006 | - 한국평화학회 회장 |
| 2004 ~ 2005 | -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
| 2002 ~ 2003 | -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 1997 | - 미국국제정치학회 이사 |
| 1995 | - 미국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 |
| 1994 ~ 2016 |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
| 1994 | - 한국정치학회 국제위원장 |
| 1987 | - 재미한국인 정치학회 이사, 사무총장 |
| 1985 ~ 1994 | - 미국 켄터키대학교 정치과 부교수 |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¹⁾

문 정 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작년 한 해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야망과 무모한 군사 도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적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증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맞으면서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한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억지와 방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공동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원칙과 4대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할 수 없고 북한의 핵 야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제주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석학 초청 강연, 2018. 5. 11.

두 번째 원칙은 평화 우선주의입니다.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며 북핵문제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군사적 행위 및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과 국제 공조 원칙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 국민과의 협의와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 자세를 취하나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유관 국가들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바로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억지와 방어, 그리고 주도적 외교입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전략적 선택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고, 북미 양자 대화 및 6자회담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작년 7월 북한에게 인도주의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군사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비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재개를 희망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의 재개는 이러한 북핵 대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크게 복원되었습니다. 김영남, 김여정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 대표단의 서울 방문은 그 동안 닫혀있던 남북

대화 채널을 재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우리 특사단의 평양 방문 시 김정은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집하며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 왔던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 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기존의 제재와 압박 전략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안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과 11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 대안적 전략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UN안보리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임 정부의 5.24 조치(대북 교류 및 협력 금지),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분명히 차선책입니다만 얼마 전까지의 북한 태도로 보아 다른 방법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제재와 압박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억지와 미사일 방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는 보복 타격의 능력, 의도, 그리고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군사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전력과 한국의 자주적 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재래식 전력의 억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지와 그에 따른 핵우산 공여를 통한 핵 억지입니다. 억지는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미사일 방어 또한 군사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방어 (active defense 패트리어트 및 사드 시스템, KAMD), 소극적 방어 (passive defense 월별 국가 방어 훈련), 공세적 방어 (offensive

defense 킬체인 및 대규모 응징 보복 조치), 그리고 전장 관리 (battle management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압 (compellence)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강압이란 무력의 과시 또는 그 사용 위협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역지가 방어적 군사대응이라면 강압은 공세적, 적극적 대응입니다. B1B, B-2, B-52 등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투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압은 미국의 핵심 전략인 반면, 한국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보다 주도적 (leading and proactive)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한 '코리아 패싱 (Korea Passing)'을 기정사실로 간주해 온 우리에게 '주도적 역할'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소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중국과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의제의 설정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4대 전략이 얼핏 모순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와 협상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옵션들과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 문 대통령에게 강압,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러한 전략적 선택은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3 Nos': 반핵, 반 군사행동, 반 정권교체

위에서 언급한 4대 전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점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핵, 반 군사행동, 반 정권교체' 라는 '3 Nos'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북핵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확장억지라는 개념 하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며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만 북한에 대한 핵억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 공여 의지가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핵무장 의지를 천명하게 되면 곧바로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초토화 될 것이고 미국과 이어온 전통적인 동맹관계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의 극심한 제재에 봉착,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또한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에 불을 당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핵 옵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반대 또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핵무장한 한국과 동북아'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리 만무하고 이런 상황 아래 기존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바로 미국이 확대억지 아래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공여할 때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논객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여 공유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표방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

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내 심각한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핵 억지에 있어 오판과 확전 가능성을 고조시켜 우리의 안전을 역설적으로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전략, 전술, 예산, 그리고 병참 상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선제적이건 예방차원이건 어떠한 군사 행동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군사조치는 북한의 보복 타격과 그에 따른 한반도 확전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문제지만 휴전선에 전개되어 있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우리에게서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현재 북한은 8,000여문의 장사포와 다연장포를 휴전선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고 개전 한 시간 내에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향해 30여만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사행동이란 모험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국, 아시아, 전 세계가 잃게 될 것은 너무나 큽니다.

더구나 군사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군사, 정치적 목표 달성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북한은 1961년부터 '전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지하병커에 은닉해 놓은 북한의 핵자산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북한의 정치 수뇌부를 외과적으로 타격, 제거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도부 제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도 반대합니다. 작년 7월 6일 베를린 연설을 비롯해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발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현 가능하

지도 않다고 믿습니다. 이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는 남북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바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부 또는 군-당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서 김정은 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중들의 저항이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종말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 시점에 이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더구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 정부가 북한 지도부 및 정권의 급작스러운 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반전 드라마

지난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은 참으로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평화롭게 무난히 치렀으면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개회식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과 김영정 부부장을 필두로 한 고위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폐회식에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북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의 특사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위기 국면을 감안하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평화 올림픽 (peace Olympic)’을 ‘항구적인 올림픽 평화 (lasting Olympic peace)’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대북 특사단을 통해 북에 전달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6개항 합의 사항을 통해 이에 화답해 왔습니다. 북은 4월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군사긴장 완화 위해 정상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군사위협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 이유 없음/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대화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하지 않고 핵무기, 재래식 무기 등 남측 향해 사용 안함/ 남측 태권도시범단·예술단 평양방문 초청 등의 남북 합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을 거론하며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남측 특사단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으로 실시되

면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측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이내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의 했던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아래 남북, 북미, 한미 간의 선순환 관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평화'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에 앞서 세 가지 의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둘째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이 세 가지 의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무기의 폐기(CVID)'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일 때만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 원하는 군사위협, 체제안전, 평화협정, 북미 수교, 그리고 제재 완화는 오로지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한반도 분단, 전쟁, 그리고 비극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던 판문점. 그 곳에서의 12시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앞에서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을 보던 북 김여정의 “현실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감동 어린 발언처럼 이는 한 편의 초현실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극심한 위기감과 전쟁의 공포에서 몸서리 쳤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 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북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2007년 1,2차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두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던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훨씬 돋보인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과 군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실속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지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산가족 문제에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이산가족·친척상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

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명시했습니다. 양 정상 모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안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준수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이 내거는 목표가 담대하고 파격적이라는 점입니다. 70년 가까이 묵은 전쟁을 그것도 금년 안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 대한 점진주의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 두 정상의 의기투합은 참으로 사변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제 설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측은 구체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은 원론적인 포괄적 합의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 두 시각을 절묘하게 절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은 기능주의와 '쉬운 것부터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先易後難)' 원칙에 의거 경제나 사회문화 부분의 협력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정치, 군사 문제가 풀리면 다른 모든 게 풀린다는 '툭 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고 전쟁 종식,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와 같은 핵심 의제에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문에 명문화 한 것도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측이 강조했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도 지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 북한의 입장을 보면 핵 문제는 오로지 미국과 북한 간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은 끝 여지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구현'을 서면 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 전례 없이 보도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더욱이 파격적인 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은 아직 사용 가능하고, 5월 중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및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정책적 행보 또한 충분히 실용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선제조건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축소나 한미동맹의 지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대화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과 자주 대화해 신뢰를 쌓고 종전선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같은 발언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뒤집어 말해 남측이 바라는 대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실현된다면, 북측도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례 없이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과거의 합의와 선언을 이행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며 이번에는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문에 포함된 합의 사항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요 회담과 행사 날짜를 선언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박은 것도 과거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5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8월 15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금년 가을 평양 방문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는 예전의 사례로 보아 매우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형식과 상징 면에서도 이번 판문점 회담은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는 장면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북한에 가볼 수 있나요?”라고 말을 하자, 김 위원장은 “지금 함께 넘어가 보지요”라고 응수하며 문대통령을 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단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 모두에게는 엄청난 합의를 가지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정상이 보여 준 것은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위적인 경계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허물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연출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적인 행동이 우리 겨레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그리고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이미지와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버릇없이 자란 비이성적이며 충동적인 젊은 지도자라고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악한 지도자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지요. 하지만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면모를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호소력 있었습니다. 대화와 협상 과정에서도 그는 역동적이고 단호한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여 주었고, 주요 사안들에 대한 숙지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만찬 중 그는 친근하면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난폭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설주 여사의 소박한 모습,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겸손한 처신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었습니다. 젊은 북한 지도자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가 먹혔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정은의 재발견.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화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원맨쇼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방, 외교,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조직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젊은 지도자를 동행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외교 부문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대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는 김영철, 리선권 등이 대표하는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 군, 내각 전 분야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북이 이제에는 보다 제도화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의 지도자가 국내의 기자 앞에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것도 새로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언 발표 후 이어진 만찬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정상 간 오, 만찬과 다르게 격식 없고 우호적이며 활기찼습니다. 두 정상과 그 배우자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개인적인 신뢰와 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찬 내내 불신과 적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끊임없이 건배를 교환하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다지며 남북관계의 밝은 미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놀라운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우선,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기획, 연출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전향적 자세는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의

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경제입니다. 금년도 신년사와 4월 21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김위원장의 결단과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성실성, 열린 마음,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 또한 크게 주효했다고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간파했고,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정직한 중재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등 국내 관계자들이 술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과 협의하고 설득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외교적 노력보다는 최대한의 압박과 강압, 그리고 군사행동을 암사하는 그의 행보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처럼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많았지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과 강압,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격려와 지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전략이 절묘하게 먹혀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은 믿기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묵은 한반도 갈등을 짧은 시간 내에 항구적인 평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숙적끼리 군사 긴장완화, 신뢰 구축, 그리고 단계적 군축을 해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과제입니다. 1993년부터 지속되어 온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시설, 물질 및 핵탄두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의향이 진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교환 방식을 강조하며 과거와 같은 살라미 전술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김 위원장이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 이행을 군부가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실리만 챙기고 다시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북의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러한 전술을 추구한다면 이번 합의 전체가 위협에 빠지게 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거의 패턴과 죄와 벌의 반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군사 행동과 전쟁 가능성을 키우면서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북한은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얻어내면서 북미 회담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입니다. 미국의 포괄적인 원샷딜과 북한의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사이에 타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살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여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더할 나위없는 호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반도는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역사 속의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개인적 욕망과 국내 정치적 이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과거와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도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정부가 바뀌어도 합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맺는 말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온 목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 위에는 숭한 제약과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한결 같이 인식할 때라야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